

한국경제의 장기적 회고와 전망

1910~2010

康 善 明*

〈目 次〉

- I. 서론
- II. 한국개발원이 발표한 남한경제의 장기적 전망
- III.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
- IV. 남한경제발전의 원천과 대가
- V. 장기적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I. 한국경제발전의 장기적 전망
- VII. 요약 및 결론

I. 서 론

지금 한국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둘러싸여 매우 유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다. 국내적으로는 88올림픽 경기를 위한 여러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시장 개방압력과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수입규제 등에 봉착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국제 이자율의 하락과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 저하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호황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앞으로의 한국경제전망은 어떠한가?

기업인은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특히 장기적 투자를 할 때는 10년부터 2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비단 기업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공공사업체에게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기 위해 한국개발원(KDI)이 1990년과 2000년의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과 1인당 GNP를 추정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던 필자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나는 1984년에 이미 1910년 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경제발전을 연

*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 이 논문은 韓國經濟學會의 「第2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1986.8.18~19)全體會議에서發表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구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을 30년 더 연장시켜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의 한국 경제를 회고하며 전망하고자 한다. 우선 KDI의 전망추계를 살펴보자.

II. 한국개발원이 발표한 남한경제의 장기적 전망

한국개발원(KDI)이 서기 2000년까지 15년 앞의 남한 경제를 전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에 의하면 1984년 GNP와 1인당 GNP가 1984년 기준 미국달러화표시 불변가격으로 각각 804억달러와 1,978달러였던 것이 GNP의 경우 1985년-1990년 사이 연평균 7.7%가, 1991년-2000년 사이 연평균 7.2%씩 증가하여 1990년에 1,256억달러가 될 것이며 1인당 GNP의 경우 동기간 중 각각 연평균 6.3%와 6.0%씩 증가하여 1990년에 2,847달러, 2000년에 5,10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을 1980년 기준 원화표시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1984	1990	2000
GNP (10억원)	49,168	76,810	154,162
1인당 GNP (천원)	1,210	1,741	3,121

이 전망추계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까? 앞으로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추계하자면 오랜 과거로부터의 실적과 역사적 배경을 참고삼아야 보다 더 신빙성있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

한국은 지난 25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또 다른 시대의 경제발전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러한 경제발전은 상당기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기7세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였다. 정치적 안정, 중국과의 교역 및 새로 싹튼 불교문화 등이 경제발전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번영은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13세

기 30년간에 걸친 몽고족의 침입으로 인해 전 국토는 유린되었으며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다. 14세기에 이씨왕조가 들어서면서 토지개혁의 실시, 유교의 숭상, 예술과 과학의 장려, 학교의 전국적 설치등을 통해 한국경제는 다시 번영기를 맞게 되었다.

16세기 말엽 일본의 침입에 대한 7년간의 항전 중에 한국의 경제기반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다. 이러한 국난에 이어 17세기 초엽 새로 일어난 만주족으로부터 두 차례의 침공을 받았으며 그 후 만주족은 한국에 대해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가해음으로써 한국의 발전을 저해시켰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두 차례의 국난으로 인해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은 약하고도 침체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 강압적으로 합병되어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미국군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인해 한국의 국토는 양분되었다. 남한의 경우 3년간의 군정에 이어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임시정부하의 3년간의 자치에 이어 남한의 정부수립 1개월 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사변은 3년간 계속된 후 휴전되었다. 한국은 민족과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인구 4천만의 남한과 2천만의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로 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70년간 한국 전체의 인구는 1910-1914년의 평균 1,550만명에서 1976-80년의 평균 5,52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GNP는 3.0조원에서 42.8조원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1인당 GNP는 20만원에서 78만원으로 증가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비교가 용이하도록 모든 가치는 1980년 불변가격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성장은 35년간의 식민지통치, 2개의 적대지역으로의 분단, 비참한 전쟁 및 극심한 물가상승(남한의 경우 위 기간중 연평균 22.75%의 물가상승을 기록)을 겪은 나라로서는 주목할만한 기록이다.

GNP 및 인구의 10년당 장기 성장율은 각각 45%와 21%로서 (표2)의 선택된 12개국 중 2번째로 높은 것이며 1인당 GNP의 10년당 장기성장율은 21%로서 위 국가들 중 4번째로 높은 것이다.

1910-14년부터 1940-44년까지의 일제하 30년 동안 1인당 GNP는 단지 35% 증가한 반면 1946-49년부터 1976-80년까지의 30년 동안은 13배가 넘는 406%나 증가하였다. 1946-80년의 기간동안 한반도의 양 지역의 경제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경우 1956-65년의 기간동안 아주 빠른 성장을 경험했고, 남한은 1966-70년부터 1976-80년의 기간동안 10년당 168%란 놀라운 성장율을 보여 “한국의 기적”이라 불린다. 이것은 “일본의 기적”이라 불리어진 1952-54년부터 1963-67년 동안의 경제성장율을 초과한 것이다.

〈표1〉 한국의 주요경제지표^a

	인 구		국민총생산		1인당 GNP		물 가 지 수	
	인구수	변화율	1980 년 불변가 격기준	변화율	1980 년 불변가 격기준	변화율	1975 년 기 준	변화율
	(천명)	(%)	(10억원)	(%)	(천원)	(%)	(1975=100)	(%)
A 5년평균(남북한전체) ^b								
(1) 1910-14	15,501	-	3,036	-	196	-	.00009	-
(2) 1915-19	16,824	8.53	3,770	24.16	224	14.60	.00015	65
(3) 1920-24	18,383	9.27	4,114	9.13	224	- .27	.00020	32
(4) 1925-29	20,113	9.41	4,526	10.03	225	.54	.00018	-08
(5) 1930-34	21,731	8.04	5,505	21.63	253	12.70	.00013	-30
(6) 1935-39	23,365	7.52	6,410	16.43	274	8.15	.00017	37
(7) 1940-44	25,118	7.50	6,642	3.62	264	-3.55	.00028	62
(1)-(7)의 변화	(9,617)	(62.04)	(3,606)	(118.78)	(68)	(35.09)	(.00019)	(210)
(8) 1946-49	28,650	14.06	4,393	-33.88	153	-42.07		
(9) 1951-55	29,210	1.95	4,649	5.82	159	3.97		
(10) 1956-60	33,293	13.98	7,553	62.45	227	42.37		
(11) 1961-65	38,398	15.33	10,929	52.76	284	25.47		
(12) 1966-70	43,824	14.13	16,522	55.62	388	36.54		
(13) 1971-75	49,568	13.11	26,528	55.97	535	37.87		
(14) 1976-80	55,158	11.28	42,758	61.18	775	44.72		
(8)-(14)의 변화	(20,508)	(92.52)	(38,364)	(873.27)	(622)	(405.95)		
(1)-(14)의 변화	(39,657)	(255.84)	(39,722)	(1,308.27)	(579)	(295.96)		
B. 5년평균(북한) ^c								
(15) 1946-49	9,398	-	1,428	-	152	-		
(16) 1950-55	8,620	-9.03	1,048	-26.64	122	-20.00		
(17) 1956-60	9,943	15.35	2,164	106.50	214	76.00		
(18) 1961-65	11,554	16.20	4,063	87.75	351	63.64		
(19) 1966-70	13,284	14.97	5,678	39.77	427	21.63		
(20) 1971-75	15,476	16.50	8,781	54.66	568	32.86		

(표 1의 계속)

(21) 1976-80	18,074	16.79	13,500	53.74	750	31.58		
(15)-(21)의 변화	(8,676)	(92.23)	(12,072)	(845.19)	(641)	(421.60)		
C. 5년평균(남한) ^d								
(22) 1946-49	19,252	-	2,965	-	154	-	.073	25,790
(23) 1951-55	20,590	6.95	3,601	21.46	175	13.83	6.462	8,768
(24) 1956-60	23,350	13.40	5,389	49.64	231	31.04	12.83	99
(25) 1961-65	26,844	14.96	6,868	27.44	256	10.79	22.16	73
(26) 1966-70	30,540	13.77	10,906	58.80	357	38.68	40.34	82
(27) 1971-75	34,092	11.63	17,747	62.73	520	45.58	54.31	35
(28) 1976-80	37,084	8.78	29,257	64.86	789	51.64	156.2	188
(22)-(28)의 변화	(17,832)	(92.62)	(26,292)	(886.8)	(635)	(413.00)	(156.1)	(214,250)
(1)-(28)의 변화	(-)	(-)	(-)	(-)	(-)	(-)	(-)	(173,555,466)

- a. 1910-36년간의 자료는 Sang-Chull Suh,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41-4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에 주로 근거한다. 1936-45년, 1946-66년간에 대한 자료는 Sun M. Kahng, "The Korean Economy and Inflation Theories," *The Korean Economist*, June 1969, pp. 2-14에 근거한다. 1967-80년간의 자료는 한국은행의 1948-81년 동안의 *Statistics Yearbook*과 *Monthly Review* 등과 같은 간행물에 근거한다. 1946-80년간에 대한 북한의 자료는 주로 Frederica M. Bunge,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74, 그리고 기타 미국 내지 북한 정부간행물에 근거한다. 그것은 임시적인 추정치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이용자는 이러한 제약점에 유의해야 한다.
- b. 남북한 합산 자료임. 이것은 위 표의 B와 C로부터 도출된다.
- c. 북한정부는 그들의 군사적 잠재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GNP 및 기타 통계수치의 시계열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자료원에 의한 GNP의 추정값은 낮은 값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북한의 자료원에 의해 가끔 발표되는 1인당 GNP는 높은 값에 놓인다. 위 표에서 이용된 추정치는 세계은행 추정치와 군사하나 다소간 높은 경향이 있다.
- d. 남한자료에 대한 위의 주석 a 참조.

〈표2〉 GNP 및 인구의 장기성장율^a

			10년당 성장율(%)			
			기 간	총생산	인 구	1 인당 GNP
(1) 한 국 (a)	1910 - 14부터	1976 - 80 까지	66	44.5	20.9	21.3
(b)	1910 - 14부터	1925 - 29 까지	15	30.5	18.9	7.8
(c)	1910 - 14부터	1940 - 44 까지	30	29.8	17.5	10.6
(d)	1946 - 49부터	1976 - 80 까지 ^s	30	114.5	24.3	72.4
(e)	1966 - 70부터	1976 - 80 까지 ^s	10	168.3	21.4	120.7
(2) 일 본 (a)	1874 - 79부터	1963 - 67 까지	88.5	48.3	12.1	32.3
(b)	1905 - 14부터	1925 - 29 까지	17.5	50.7	13.5	32.8
(c)	1925 - 29부터	1952 - 54 까지	26	25.6	14.3	9.9
(d)	1952 - 54부터	1963 - 67 까지	12	152.8	10.7	128.4
(3) 대 만 (a)	1903 - 07부터	1934 - 38 까지	31	41.4	19.7 ^e	20.0 ^e
(b)	1910 - 14부터	1925 - 29 까지	15	59.3	13.7 ^e	35.0 ^e
(c)	1951 - 55부터	1969 - 73 까지	16	146.3	37.7	78.9
(d)	1959 - 63부터	1969 - 73 까지	10	149.6	28.3	94.3
(4) 스웨덴	1861 - 69부터	1963 - 67 까지	100	37.4	6.6	28.9
(5) 이태리	1895 - 99부터	1963 - 67 까지	68	31.4	6.9	22.9
(6) 독 일	1910 - 13부터	1963 - 67 까지	53.5	33.1	10.4	20.5
(7) 미 국	1910 - 14부터	1963 - 67 까지	53	35.1	14.2	18.4
(8) 멕시코	1985 - 99부터	1963 - 67 까지	68	40.8	18.1	18.2
(9) 프랑스	1861 - 70부터	1963 - 67 까지	98.5	20.5	3.0	17.0
(10) 영 국	1855 - 64부터	1963 - 67 까지	105.5	22.8	8.2	13.4
(11) 필리핀	1902 부터	1963 - 67 까지	63	38.7	25.8	10.3
(12) 인 도	1861 - 69부터	1963 - 67 까지	100	16.2	9.4	6.2

a. 한국에 관한 자료는 〈표1〉로부터 도출된다. 다른나라에 대한 자료는 Simon Kuznets, World Bank, 한국은행의 자료 등 여러 출처에서 얻은 것이다.

s. 남한에만 해당한다.

e. 개략적 추정치

이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외국의 압정하의 30년보다 해방된 후 30년 기간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발전을 뒷받침한 기본적인 추진력은 무엇인가?

Ⅳ. 남한경제발전의 원천과 대가

경제발전이란 다양한 문화적 기술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북한경제발전에 관한 자료는 수집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남한의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문헌이 이용가능하다. 그러므로 남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경제적 요소를 먼저 다루어보기로 하자.

1. 경제발전의 주요원천

1960년대 이후의 남한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무역의 확대, 자본형성의 증가,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가) 무역의 증대

1960년까지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은 외국 경쟁기업들로부터의 국내유치산업 보호와 수입대체산업의 국내육성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많은 보호정책들이 국내 유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는데, 반면에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저해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인이 식민치하에서 겪었던 외국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년에 GNP의 2%에 불과했던 수출은 극히 보호적인 국내시장 환경에서 크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보호적인 환경덕분에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많은 유치산업들이 훨씬 우월한 외국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들의 주무기는 고등교육을 받고 효율적이었지만 값싼 국내노동력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이 내부지향적인 것에서 외부지향적인 것으로 이행하면서 시기의 덕도 많이 보았다. 베트남전쟁과 세계경제의 팽창으로 한국의 수출은 손쉽게 시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거대한 미국시장에 진출한 것도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군대와 민간인 노동력을 투입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군대와 민간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와 베트남에 대한 수출로 인해 최신식 기계류와 기타 생산설비를 도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후 중동산유국에 대한 인력수출과 건설활동으로 근대화과정은 가속화되었다.

수출확대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조

치로 상당한 양의 일본자본이 유입됨으로써 일본의 기계와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고 일본과의 무역도 늘어났다.

헌법의 개정으로 보호적인 조항들이 삭제되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인정책이 도입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매우 양호해졌다. 매우 양호한 기업환경(5년간의 법인세면제, 직접투자에 대한 최소 수익율의 보장, 공해방지법의 부재, 엄가의 산업입지, 노동보호법의 실질적인 부재, 고등교육을 받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저임금 등)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조립생산하고 이를 미국이나 기타 고소득 국가에 재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설립했다.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철강, 비료, 시멘트, 합판, 조선 등 많은 근대적인 산업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팔렸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광범위한 산업공해가 뒤따랐다.

한국의 상품무역은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1960-70년과 1970-78년의 기간 사이에 수출은 각각 35%와 2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여기서 인용된 모든 수치는 \$ 표시 경상가격임) 1978년의 상품수출은 \$127억이었고 이는 그해 한국 GNP의 30%에 해당한다. 산업수출은 \$85억으로서 중·후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상품수입도 수출증가와 보조를 같이하여 증가하였는데 항상 입초를 기록하여 왔다.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외채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외채규모는 1978년에 \$150억, 1983년 초에는 \$370억에 달했다.

제조업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제조부문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 1960-1970년과 1970-78년 기간 사이에 각각 17%와 18%의 연평균 성장율을 보였다. 수출증대는 경제의 총산출과 고용을 늘려 실업율이 1963년의 8%에서 1974년에는 4%로 감소했다. 또 제조업 부문의 실질임금은 1967~72년 사이에 11%가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간의 노동력의 이동을 유발하여, 생산성이 낮고 유희 노동력이 많던 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로 노동이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노동력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던 비중은 1960년의 66%에서 1978년에 41%로 떨어진 반면 산업부문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9%에서 37%로 늘어났다. 무역의 증가는 또 외국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였다.

(나) 자본축적의 증가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분위기와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확장에 대한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은 자본축적을 촉진시켰다.

1960년에 GNP의 11%였던 국내 총투자는 1960~70년 사이에는 연평균 24%씩 급격하게 상승했다. 1970~78년 사이에는 성장율이 14%로 감소했다. 사회간접투자와 산업

시설같은 자본 축적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의 생산성을 상승시켰다. 국내 총저축은 1960년에 GNP의 1%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저축율은 정부가 저축금리를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고,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에는 장기에금 금리가 상승하고 증권시장이 개발되어 국내저축을 유인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GNP의 30%에 이르렀다.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대한 국내 저축의 부족은 정부의 차관도입정책과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 의해 충당되었다. 1965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중장기공공차관이 1970년에는 \$20억, 1978년에는 \$12억로 증가했다.

(대)노동생산성의 상승

1967년부터 1975년 사이에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씩 급격하게 상승했다. 제조업 분야는 이 기간동안에 280% 상승하여 노동생산성 상승을 선도했다. 이러한 상승은 같은 기간의 일본(190%), 서독(150%), 미국(110%)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생산성 상승은 상당부분이 무역과 외국의 직접 투자의 증가 및 외국기술의 유입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잘 교육된 인력의 획득 가능성에 크게 의존한다. 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발전은 외국 기술과 경영의 노우하우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과 연구활동의 촉진, 인력훈련의 확장, 공공건강의 증진에 대한 정부정책이 노동생산성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국민의 도덕적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일에 대한 열성을 유도했고 자식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특히 한국여성들의 높은 도덕수준과 가족에 대한 헌신은 모든 훌륭한 행동의 원천이었다. 매우 경쟁적인 교육제도, 또한 높은 도덕적 행동과 과거의 애국자와 순교자들의 본보기는 정부의 부패를 제약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생산성 상승에 공헌한 것이다.

2. 급속한 발전의 대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근대화, 물적 생활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혜택을 가져왔으며 국가의 지위 및 군사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모든 이득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수반된다.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상으로 얻는 것은 없다. 조만간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대가는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무형의 것일 수도 있다. 외채의 증가, 산업공해로 인한 국가자연자원의 파손 등은 분명히 드러나는 대가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의 붕괴 및 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간섭 등은 파악하기 힘들며 잠재적으로 더욱 해를 끼치는 대가이다. 불행하게도 공해 및 기타 무형적인 대가를 아직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외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다.

1983년 초 공식적으로 발표된 외채는 370억 달러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액수인가? 외채의 크기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액수는 1983년 국민소득의 71%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949달러이며 이는 1983년 1인당 국민소득의 71%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한국의 50대 재벌산하의 기업은 GNP의 20%를 생산해 냈다. 이들 기업들의 자산, 자본 및 이익 합계는 각각 310억달러, 56억달러, 8억달러였다. (1983년 현재) 외채총액은 이들 기업들의 자산 합계 보다 많고 자본합계의 6배 이상이다. 외채에 대한 이자율이 연 10%라면, 연간 이자비용은 37억달러로서 이들 기업들의 이익합계의 5배에 해당된다. 이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무서운 현실이다. 개인이 과다한 부채를 질 때 재정적 파산과 인간적 존엄과 독립의 상실을 가져온다.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무거운 외채가 짐증하고 이자 및 원금이 기한내 지급불능하게 되면 경제적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채무국은 외국의 이해관계들에 대해 일련의 이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독립마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독립의 상실은 한국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봉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책은 경제조건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과다한 긴급금융정책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보호무역 수단을 갑작스럽게 큰 규모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양보는 국내 산업의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외채사정을 호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학자 및 정부의 정책수립자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5년간의 남한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무겁고도 지속적인 대가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역사로부터의 교훈

지난날의 역사로부터 가치있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일본도 근대화의 초기에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메이지시대 동안 일본은 수많은 외국기술을 도입했다. 일본에는 이들 외국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잘 교육된 인력이 있었으며 다행히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강력하

고 독립적이며 안정된 정부가 있었다. 정부는 그들의 유치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했고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까지 대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49-60년간의 한국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험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고도의 외국기술이 들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인력이 이들 국가에는 없었다. 외국의 자본과 이익이 이들 국가의 기업활동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무거운 외채부담을 지고 있다. 경제적 독립의 상실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종속을 야기시킨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자기나라 국민의 이익보다는 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사회적 불안을 가져왔고 일부 라틴아메리카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강압적 수단으로 억누르려고 있다. 이들 국가의 GNP는 증가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설계해야 하는 한국의 학자와 정책 수립자들은 이러한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V. 장기적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은 정치, 종교, 교육, 가족제도 등 여러 사회제도의 변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또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 경제발전을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시야를 넓혀 다각도로 장기적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군사적 자주독립성

한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자면 정치의 자주독립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장기간 외국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을 보면 풍부한 자원과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몇가지만 들어보겠다.

첫째, 외국이 한 나라를 지배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자국민의 경제적 이권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지배국의 법률, 경제, 기타 제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지배자들은 정의감에 불타는 애국애족하는 인재들을 무슨 이유를 붙여서

든지 직접, 간접으로 제거해 버린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는 비굴하고 외세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세째, 고등교육,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등 사회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직접·간접으로 제한한다. 특히 정치사상발전을 철저히 억제한다. 이러한 제한과 억압은 피지배 국민의 의사소통, 문화창달, 단합의 기회를 줄이는 한편 지배국에 편리한 사상주입을 가능하게 한다.

네째, 지배국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지배국을 지배할 경우에는 피지배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자기네들에 의존해야 할 자로 하여금 실권을 장악하게 한다. 그러한 자에게 약점이 있어야 이용가치가 높을 뿐더러 국가권력과 국민이 단합할 경우 지배가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외세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한 이러한 조건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조말기와 일제하의 한국은 물론 칠레 등 중남미제국, 소련의 지배하에 있는 동구 제국, 인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제국 등 여러나라들이 이러한 악조건을 경험했음은 잘 알려진 예이다.

2. 건전한 가족제도와 국민성

한국이 외세에 눌러 시달리며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경제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좋은 가족제도의 전통과 건전한 국민성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전통적 한국여성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양육과 교육에 정성을 다할 때 건전한 인간이 자랄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정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은 인재를 낳게 하였다.

1945년 이후 한국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는 좋은 가족제도와 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건전한 국민성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애국애족과 직결된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히 일으켜 보려는 정성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동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었던 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번영을 누렸다. 일제하와 우리 민족이 수립한 정권 하에서의 경제발전을 비교해보면 이를 새삼 느끼게 된다.

제2차대전에서 패한 후 일본이 재기할 수 있었고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된 원동력을 그들의 끈질기고 강한 애국애족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허영에 뜬 생활을 하지 않고 자국 상품을 애용한다.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여 솔선 수범한다. 이로 인해 그들이 저축한 자본으로 투자하여 외채없이 발전해왔다.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적어 외환을 저축해왔다.

한국국민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부해지고 외채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국내시장이 넓어지며 대외 수출의존도가 줄어들어 경제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3. 대외교류와 의사표시의 자유

이조말기에 있어서 발전을 저해한 원인중의 하나는 대외교류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45-48년간에도 나타났다.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사회와 자유로운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교육, 기술, 종교, 사상 등 모든 면에서 얻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북과 해외를 자유로이 다니며 통신을 할 수 없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경제적 마비도, 동족살상의 비극도 면했을지 모른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이 넓어져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문물의 자유로운 교환은 한 나라의 문명과 정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뒷받침을 선진국들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많은 유학생과 공무원 및 군인들의 해외파견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영방법 및 기타 지적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했다.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명랑성을 가진 나라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 국민들의 종교, 사상, 정치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으며 의사표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내의 마찰을 장기적으로 극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언론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면 행동을 통한 시위도 필요없으며 그에 따른 파괴행위도 수반되지 않는다. 그만큼 치안유지비 같은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막대한 군사비지출은 말할 나위 없는 낭비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풍부한 천연적·인적자원을 가진 미국의 1인당 GNP가 세계1위에서 10위 이하로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낭비적인 군사비지출이었다. 천연자원과 자본축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족간 혈연싸움을 위한 자원과 인력의 소모는 가능한 피하고 극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정치·외교의 빈곤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충돌이 너무 많았고 오래 끌어왔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대외교류와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었음에 기인하며 경제적 성장을 저해해 왔다.

4.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무역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시장을 개방하여야 교역상대국시장도 개방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하여야 적절한가에 있다. 국내기업체의 성장과정과 국익을 참작하여 개방품목을 정하여야 한다.

힘있는 자는 약한 자와 자유경쟁하기를 좋아한다. 한때 영국이 그러했고 근래까지 미국도 그러했다. 미국은 요사이 자국의 산업(직물, 강철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에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상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업, 증권시장, 지적 소유권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조건을 위해 회의를 서울에서 열렸다. 군사비밀도 아닌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에 충격을 느꼈다. 만약 한국정부가 국내 기업인과 학계의 의향을 참작할 사이도 없이 외부압력에 못이겨 국내시장을 성급히 개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나친 개방, 즉 국내산업이 건디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지향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호황을 이룰지 모르나 장기적 안목으로는 내국인의 산업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한다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격이 되어 버리듯 외국인의 거대한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국내 기업체들이 합병되거나 도산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가 정치력도 좌우한다. 경제권을 상실하면 정치권도 상실하고 만다. 중남미에서는 금융업으로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상사에게 시장을 점유당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콜롬비아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고 약 200가구만이 외국인과 더불어 부를 누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극도의 빈곤속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다.

어떤 자는 시장개방으로 GNP가 커진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럴수도 있다. 그러나 GNP(국민총생산액)는 한 국가영토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수 외국인이 부를 축적하고 그 때문에 내국인이 경제적으로 몰락될지라도 전체적인 경제활동량이 커지면 GNP는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국가 산업에 유익하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하면 개방을 늦추거나 극소화해야 한다. 외부압력이 있다라도 국내여론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며 정부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한국민족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지

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개척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시장은 우리 경제내에서 구할 수 있다.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자원시장도 그러하다.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및 광업 등은 상호협조 내지 보완하여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다. 과학의 발달로, 또는 도입기술의 국산화로 원료와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성장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성장이다. 만약 세계정세가 허락하고 정치인의 지혜로써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이 이루어진다면 풍부한 시장이 우리 삼천리강산내에 개척된다. 또한 중공과 소련과의 무역이 가능하게 되면 그만큼 해외시장도 넓어지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6. 저축과 투자

국내저축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내자로 충당하면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450억불이라는 외채를 지고 있다. 앞서 본 바와같이 1983년초 국내 50대 재벌 산하기업들의 순자산합계가 56억불이며 총이익액은 8억불이라 한다. 이 모든 기업들을 외국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450억불이나 되는 외채를 갚을수가 없다. 외채의 1년간 이자는 약 40억불이고 기술도입을 위한 로열티(Royalty)는 2억5천만불이다. 이 역시 50대 재벌의 총이익금을 훨씬 넘는다. 앞으로 외채가 늘 가능성이 많다. 외채를 더이상 늘려서는 안된다.

외국의 고도 기술과 경영기법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힘써야 한다. 대학교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투자의 하나이다. 현재 기술발전을 위하여 각종의 학교,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외교·경제·경영분야에 대한 연구도 기술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이 겪었던 많은 비극과 곤경은 정치·경제·외교·경영분야에 대한 지식의 빈곤에서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필요한 투자를 국내저축으로 뒷받침하려면 국민들이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로는 고위층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이러한 애국적 생활방법을 향상시키면 그만큼 외채가 줄고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7. 국내외 사회의 명랑성

지난번 2대강국의 실력자가 함께 만나 담소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다. 참으로 인류의 후손들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위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인류복지를 위한 투자로 쓴다면 10년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GNP가 인류의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만일 남북한의 영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의 복지를 위해 진실한 회담을 갖게 되고 휴전선의 긴장완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의 명랑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예를 들면 시장개방압력)이 있을 때 정부를 온 국민이 반등고 단결하면 그 압력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지 못한 정부는 외세 압력에 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군사권의 정점을 외국인에게 갖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예: 폴란드). 사회가 명랑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사회마찰이 발생한다. 의사소통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언론자유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참다운 언론자유가 있고 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이 불필요하게 된다. 중남미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정부와 다수 국민간의 반목이 심한 나라에는 건전한 경제발전이 오래 계속되기 힘들다.

명랑한 사회와 평화적 정부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고문과 같은 악습을 현신쩍처럼 버려야 한다. 고문은 정치적 보복의 산모이다. 정치적 보복의 위험이 있는 한 집권자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권좌를 지키려 한다. 필리핀,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실례를 볼 수 있다.

심한 정치적 갈등과 불안은 사업경영의 위험도를 높여 투자활동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크게 해친다. 앞으로의 국내외 사회의 명랑성 여하가 장기 경제발전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Ⅶ. 한국경제발전의 장기적 전망

앞으로 25년간 한국경제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는 앞서 IV절과 V절에서 다룬 요인들의 변화에 달렸을 것이다. 그 변화의 폭을 알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과거실적을 살펴보자.

1. 세계각국의 발전실적

(표2)는 세계각국의 GNP, 인구 및 1인당 GNP의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1861-69년부터 1963-67년까지의 100년간 다음과 같은 10년당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GNP = 37.4%, 인구 = 6.6%, 1인당 GNP = 28.9%, 동기간 중 인도는 각각 16.2%, 9.4%, 6.2%를 기록했다. 영국은 각각 22.8%, 8.2%, 13.4%가 성장하였다.

장기적 전쟁없이 평화를 누렸고 인구 증가율이 낮았던 스웨덴이 가장 높은 1인당 GNP 성장율(29%)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고 인구증가가 빨랐던 인도의 성장율(6%)이 가장 낮다. 기타 제국은 반세기이상의 장기간 10.3%로부터 22.9%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단, 일본의 32.3%만 예외이다. 일본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26년동안 아주 낮은 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한 광대한 자원의 낭비와 파괴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12년간 128.4%란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전쟁에 참여함 없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호경기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만도 1950년초부터 16년간 78.9%란 높은 1인당 GNP 성장율을 성취하였다.

한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대 초반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의 15년간 7.8%란 아주 낮은 성장율과, 1960년대 후반까지의 10년간 120.7%란 높은 성장율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의 25년간 한국의 1인당 GNP 성장율도 이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한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여건의 변화 전망

한국경제발전은 국내적·국외적 여건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이다. 최악의 경우 미·소가 핵전쟁으로 말려든다면 한반도는 제일 먼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첨단무기로 재무장한 강력한 일본군이 초토화된 남한을 다시 점유하게 되고 소련군이 북한에 재투입될 것이다. 최선의 경우는 미·소·중공이 화합협력하여 참다운 세계연방정부를 수립하여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휴전선의 군사적대립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간에 한반도는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1988년 미대통령 선거까지 악화의 경향으로 흐르다가 반전하여 1990년부터 화평의 길로 기울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에따라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관계도 호전하여 40년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중전협정이 성립되며 U.N.사령부도 해체된다. 북한은 군비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지어오다 경제적 여유를 갖게되고, 세대교체로 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가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을 지향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민주정치가 더 발전하여 국

〈표 3〉 한국경제의 장기적 전망

	인 구		국 민 총 생 산		1인당 GNP	
	인 구 수 (천명)	변 화 율 (%)	1980년 불변가격 기준 (10억원)	변 화 율 (천원)	1980년 불변가격 기준 (천 원)	변 화 율 (%)
A. 5년평균 (남북한전체)						
1976~80	55,158	11.28	42,757	61.18	775	44.72
1981~85	60,562	9.80	65,641	53.52	1,084	39.87
1986~90	65,832	8.70	97,037	47.83	1,474	35.98
1991~95	70,705	7.40	137,524	41.72	1,945	31.20
1996~2000	75,001	6.08	194,416	41.37	2,592	33.27
2001~2005	78,550	4.73	284,615	46.40	3,623	39.78
2006~2010	81,196	3.34	430,616	51.30	5,303	46.37
B. 5년평균 (북한)						
1976~80	18,074	16.79	13,500	53.74	750	31.58
1981~85	20,604	14	20,089	48.81	975	30
1986~90	23,077	12	28,800	43.36	1,248	28
1991~95	25,385	10	39,905	38.56	1,572	26
1996~2000	27,415	8	56,036	40.42	2,044	30
2001~2005	29,060	6	83,141	48.37	2,861	40
2006~2010	30,222	4	129,714	56.02	4,292	50
C. 5년평균 (남한)						
1976~80	37,084	8.78	29,257	64.86	789	51.64
1981~85	39,958	7.75	45,552	55.70	1,140	44.45
1986~90	42,755	7.0	68,237	49.80	1,596	40
1991~95	45,320	6.0	97,619	43.06	2,154	35
1996~2000	47,586	5.0	138,380	41.76	2,908	35
2001~2005	49,490	4.0	201,474	45.60	4,071	40
2006~2010	50,974	3.0	300,902	49.35	5,903	45

민 스스로가 선택한 훌륭한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언론과 정치활동의 자유에서 오는 국민의 각성, 경제적 필요, 재군비한 일본에서 느끼는 위협 등은 마침내 통일된 한국정부를 해방후 50년이 지난 1995년쯤 수립하게 될 것이다.

3. 한국경제발전의 장기적 전망

(표3)의 장기적 전망은 1910년 이래 한국경제와 세계각국의 경제발전실적을 참작하여 추계되었다. 1년 앞을 예측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25년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앞서 지적한 여러 발전요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앞날의 실수(實數)가 정하여질 것이다.

이 추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GNP의 성장율이다. 남북한 인구증가율은 점차 낮아져서 2006-2010년 평균 3-4%로 될 것이라 본다. 1인당 GNP도 1995년까지 성장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6-2010년 평균 45-50%로 상승할 것이다.

1910년에서 2010년까지 한반도의 인구는 5배 이상, 즉 81.2백만인이 되고 국민총생산(GNP)은 198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서 430억조, 즉 142배나 는다. 1인당 GNP도 20만원 미만에서 530만원이상으로 27배 이상 늘 전망이다. 이 숫자를 1985년 원화가치로 환산하면 GNP는 593조원, 또는 미화로 6,656억\$이며 1인당 GNP는 730만원 또는 8,197\$이다. 그야말로 고소득을 갖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장기에 걸쳐서 추계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일본 지배 초기의 통계는 한국인구를 고의적으로 작게 나타낸 왜곡이 있었으며, 그 이전의 것은 통계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낮아서 부득이 1910년 이후의 분석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또 1939-1945년간은 전시였기 때문에 자료 발표가 없었고 일본이 패전 직후 이 시기의 귀중한 자료들을 불태워버렸다.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동란을 거치는 시기도 통계자료의 작성에 많은 곤란이 있었다. 북한의 자료는 1945년 이후의 것은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신빙성에도 의심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을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기적 역사를 돌아 보아야 한다고 느껴 잠정적인 추계를 작성한 것이다.

Ⅶ. 요약 및 결론

한국 경제의 과거 75년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의 25년을 전망 추계해 보았다. 이제 되살펴본 지난 발자취를 요약해 보자. 과거 75년간의 전반적인 성장율을 1인당 GNP의

면에서 파악하면 평균적으로 10년에 21% 정도였다. 이는 괄목할만한 숫자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장기적 성장율을 이루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일본·대만·스웨덴·이탈리아·독일 등도 모두 20% 혹은 그 이상의 10년당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과 스웨덴의 성장율은 각각 3.2%와 29%였다. 그러나 1946년 이후 한국이 이룩한 중기성장을 72%는 이들 12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반면에 1945년 이전의 중기성장을 10%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같은 지역의 같은 민족이 보인 이러한 성장율의 커다란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억압적인 외국의 지배하에서는 경제성장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지배 하에서는 개인의 열망을 발전시키고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있다. 외국의 지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게 되고 민족정기와 올바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식민치하의 한국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냈던 것이다.

반면에 1946년 이후의 경이로운 성장은 국가재건정신의 열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개인의 업적이 자신의 확고한 노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국가의 발전도 국민의 의지와 결심에 좌우되는 것 같다.

1946년 이후의 급속한 성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문맹율이 매우 낮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예로부터 매우 높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과 한국인이 직면하고 있던 도전과 기회들로 인해 단시간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정부계획에 의한 교육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활짝 열린 교육의 기회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자는 부모들의 열성과 희생이 밑받침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랜 갈증 끝에 물을 마시듯 지식을 흡수했다. 다행히 풍부히 집적된 지식을 수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세계 각국에서 발달한 지식을 국내로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한국인의 좋은 두뇌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이것이 아마도 한국이 그러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1946년 이후 남북한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흐른 데 반해 남한은 꾸준히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변해 갔다. 이 둘은 각각 15만 2천원과 15만 4천원이라는 같은 1인당 GNP 수준에서 출발하여 둘 다 35년간 급속한 성장율을 보이면서 98만원과 114만원의 근사한 1인당 GNP를 기록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논리적 필연인가? 이와 비슷한 예는 또 있다. 2차대전 후 동·서독은 분할되어 서로 다른 노선을 걸어갔지만 둘 다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경제생산성이 그 나라의 경제체제의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그 국민의 열성과 교육수준 및 기타 문화적으로 이어받은 속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한국의 경험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 한다.

한국의 현재 1인당 GNP 수준은 많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낮다. 한국이 만약 분단되지 않은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로서 남북의 자원의 상호보완, 규모의 경제를 갖고, 또 적대지역으로 분단됨으로써 생긴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이 없었다면 지금쯤 한국의 1인당 GNP가 얼마나 높았을까 생각해 본다.

경제발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1인당 GNP를 척도로 사용했다. 이것은 훌륭한 근사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1인당 GNP의 증가로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인적자원의 생산잠재력의 향상, 자연환경의 개선, 자본 및 재무자원의 축적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척도는 한 나라가 국민의 더 낮고 더 행복한 생활(현재의 국민뿐 아니라 후세의 국민들까지도 포함하여)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얼마나 개발했는가에 두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의 대가·외채부담의 증가나 공해로 인한 때묻지 않은 국토의 손상 등-도 평가해야만 한다. 이는 정당한 평가를 위해 제기되어야 하는 타당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어떠한가? KDI의 1990년과 2000년의 남한 경제전망추계는 필자가 작성한 남한의 수치와 근사하며 타당성이 있는 전망이라 생각된다. 나의 전망 추계, 특히 북한의 것은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나 매우 잠정적인 추계이다. 보다 신빙성 있는 추계가 나올때까지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은 추계가 나와 대체대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IV절과 V절에서 언급한 변수 여하에 따라 그리고 국민과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좋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또 정치, 외교의 빈곤으로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단합으로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30년간을 살다온 필자에게는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복받은 땅이며, 그 모든 혼란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훌륭한 경제발전은 얼마라도 성취할 수 있으며, 그의 실현은 오직 국민,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